

별거벗은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의 민낯

조선일보가 3월 18일 국가보조금법 위반, 형법상 사기죄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조선일보가 시민사회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기는 다반사이지만, 이번은 사정이 좀 다르다. 김승원·김용민·노웅래·민형배·안민석·윤영찬·최강욱 등 ‘힘 있는’ 여권 의원 29명이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박용학 전 ABC협회 사무국장도 이날 이성준 회장과 ABC공사원 12명을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국수본에 고소했다. 앞서 3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의 ‘ABC협회 사무검사 결과 및 조치 권고사항’이 발표된 데 따른 것이다.

문체부의 사무조사는 협회장의 독단과 전횡으로 부수공사(公査)가 왜곡되었다는 ABC협회 관계자(박용학 전 사무국장)의 내부고발에 따른 것이다. ABC협회는 신문·잡지 등의 발행부수를 회원으로부터 보고받아 공사 확인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문체부 소관 사단법인이다.

ABC협회는 매년 회원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수공사를 진행한다. 부수공사란 협회가 신문 및 정기간행물 사업자의 본사 및 지국에 직접 공사원을 파견해 신문 및 잡지의 발행현황을 검증해 조사하는 것이다. 지국공사의 경우 협회가 공사대상 지국을 임의로 지정해 부수공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부수공사 결과는 인증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해 확정된다.

부수공사는 정부광고 및 정부보조금과 밀접한 관련

부수공사는 정부광고 및 정부보조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선 정부광고법에 따르면 문체부장관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광고 요청을 받은 경우 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신고·검증·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홍보매체로 ‘우선 선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문체부가 전국 10,742개나 되는 신문잡지의 발행·유가부수를 일일이 확인할 순 없는 노릇이다. 이에 ABC협회가 매년 실시하는 부수공사(ABC부수공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중앙지의 경우 발행부수 80만부·유료부수 60만부 이상인 신문사는 A군, 발행부수 7만~30만부·유료부수 5만~20만부인 신문사는 B군으로 분류해 광고단가를 차등 책정하고 있다. ‘2020년도 부수공사 결과 대비 정부광고료 현황’([표 1])을 보면, ABC부수공사 결과가 정부광고 단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체부는 매년 ‘뉴스유통구조 개선사업’의 세부사업인 ‘신문 수송·우송비 지원사업’을 통해 신문·잡지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문 유통망을 유지, 확대하고 다양한 종류의 신문을 보급해 국민의 신문 구독환경을 개선하고 여론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이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ABC인증 발행·유료부수 등을 기준으로 삼아 A등급부터 E등급까지 가중치를 산정해 지급하고 있다.

[표 1] 2020년도 부수공사 결과 대비 정부광고료 현황

매체사명	2020년(2019년도분) 부수공사결과		2020년도 정부광고		
	발행부수	유료부수	건수	총액(백만원)	총액/건수(백만원)
조선일보	1,212,208	1,162,953	782	7,616	9.7
동아일보	925,919	733,254	869	9,515	10.9
중앙일보	861,984	674,123	881	8,320	9.4
한겨레	205,748	192,853	933	5,094	5.5
한국일보	219,672	172,577	972	5,152	5.3
경향신문	190,677	165,512	953	4,930	5.2

정부광고와 유통보조금은 허투루 쓰면 안되는 국민세금이다. 부수공사가 정부광고 집행과 보조금 지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수공사가 왜곡되었다는 내부고발(진정)에 대해 문체부가 사무검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개선조치를 권고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인 것이다.

흔히 신문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지(破紙)를 제외하고 인쇄공장에서 각 신문지국이나 가판상인에게 수송되는 부수를 발송부수라고 하고, 신문지국 등에 도착한 발송부수에서 독자에게 유가로 보급되는 부수를 유가부수라고 한다.

하지만 2020년 신문수송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한 결과, 신문지국에 도착한 발송부수의 상당수는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업자에게 전달된 것이었다. 이른바 잔지(殘紙)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식 표기인 잔지는 발송은 되었지만 배달되지 않는 부수이다.

신문의 실제 유통부수는 일평균 500만…200만부는 ‘잔지’

잔지는 신문사 경영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매일같이 약 700만부가량을 발송하고, 이 가운데 약 200만부 이상이 잔지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유통부수는 많아야 일평균 500만부인 것이다.

그렇다면 신문사는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 잔지를 계속해서 양산할까? 인터뷰에 응답한 신문지국장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유가부수는 없는데 발송부수를 밀어내고 지대를 요구하다 보니, 잔지를 팔아서 지대를 내는 것”이었다. 신문사 스스로 제 살을 깎아 먹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유가비율을 높여서 광고를 유치하기 위함이다.

ABC협회가 발표한 2020년도(2019년분) 일간신문 163개사 인증부수 결과에 따르면, ‘유료부수 상위 10개사’([표 2])에는 이른바 메이저 신문이라고 하는 ‘조중동’과 경제지, 그리고 마이너 신문들이 고루 포진해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조선, 한겨레, 문화 등 유가비율이 90%가 넘는 신문들이다. 특히 조선일보는 발행부수 1,212,208부에 유료부수 1,162,953부로 유가비율이 업계 최고인 95.94%나 된다.

[표 2] 2020년도(2019년분) 일간신문 인증부수(유료부수 상위 10개사)

순위	신문명	발행부수	유료부수	유가비율	비고
1	조선일보	1,212,208	1,162,953	95.94%	
2	동아일보	925,919	733,254	79.19%	
3	중앙일보	861,984	674,123	78.21%	
4	매일경제	706,760	554,228	78.42%	
5	농민신문	430,518	422,282	98.09%	주3회
6	한국경제	526,908	355,388	67.45%	
7	한겨레	205,748	192,853	93.73%	
8	문화일보	195,068	181,108	92.84%	
9	한국일보	219,672	172,577	78.56%	
10	경향신문	190,677	165,512	86.80%	

하지만 박용학 전 사무국장과 조사에 응한 지국장들에 따르면, 유가부수 비율이 90%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업계의 현실에 비추어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마디로 조작과 부정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과장된 수치라는 것이다.

ABC협회와 조선일보의 발행·유료부수 조작은 문체부의 사무검사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조선일보 9개 지국에 대한 사무검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판매한 유료부수는 78,541부에 불과했다. 이는 해당 지국들이 ABC협회에 제출한 유료부수 157,730부의 49.8%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표본으로 추출한 9개 지국 중 7개 지국의 성실률이 40~50%대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조선일보 지국의 대다수가 이와 같은 부수조작을 저질러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성실률은 신문사가 협회에 보고한 유료부수에 대하여 공무원이 실사를 통해 인증한 유료부수 비율이다. 조선일보는 성실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불량회원’인 것이다.

요컨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조선일보의 2020년도 부수공사 결과는 유료부수 1,162,953부가 아닌 579,034부로 집계됐어야 했다. 즉, 조선일보와 ABC협회의 공모와 조작으로 유료부수 실적이 두 배 가량 부풀려진 것이다.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2020년 한 해 동안 76억1,600만원의 정부광고를 수주했다. 하지만 피고발인들이 부수공사를 조작하지 않았다면 조선일보에게 적용되는 단가는 A군(1면 1단 1cm 기준 최대 230,000원)이 아닌 B군(최대 150,000원)이어야 맞다. 이를 산술적으로 적용하면 조선일보가 2020년도에 수주했을 정부광고비는 46억6695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즉, 부수공사 조작으로 인해 조선일보는 2020년 한 해에만 30억원 규모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다.

또한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신문 우송·수송 지원사업과 관련해 2020년 한 해 3억1,000만원을 포함해 지난 10년간 46억3,8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배분기준에 ABC협회 부수공사 결과를 직접 지표로 활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조선일보는 부수공사 조작의 결과로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ABC부수공사 조작은 국민과 정부를 속인 사기행위

해당 신문의 영향력은 물론 광고비 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표인 ABC부수공사를 조작한 것은 국민과 정부를 속인 사기행위다. 만약 신문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가부수 조작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면 이는 광고주와 정부 그리고 국민들을 속인 사기죄(형법 347조)에 해당된다. 해외 사례를 보면, 2004년 미국의 델러스모닝뉴스는 독자수 약 4만명을 속여 발표한 사실을 인정하며 광고주들에게 276억원을 환불한 적이 있다. 전체부수의 1.5~5%를 속인 결과였다.

또 조선일보는 조작된 부수공사 결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선일보와 ABC협회 관계자들은 광고주와 정부를 속여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 이는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와 형법 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된다.

이에 국회의원인 고발인들은 조선일보를 ABC부수공사 조작을 통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위반죄 △형법 제347조(사기죄) 위반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위반죄 △형법 제12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대표 고발인 김승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가수사본부의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매년 수억원의 신문유통 보조금을 지급받았고 100만부가 넘는 조작된 유가부수로 100억원에 가까운 정부 광고비를 수령했습니다. 또 선량한 국민과 기업을 속여 매년 수천억원의 광고비를 받았습니다. 부정과 불법으로 유가부수를 조작해 국민의 혈세와 재산을 편취한 조선일보의 보조금, 차액의 광고비는 환수해야 합니다.”

김 의원의 회견 내용은 전두환 추징금 및 국고환수를 연상시킨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추징금 선고액 2205억원 중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234억9100만원 을 집행(집행률 56%)해 미납 추징금은 아직 970억900만원이 남아 있다.

정부와 여권의 ‘짜고 치는 고스톱’?... 조선은 억울하다?

조선일보로서는 여권 의원들이 자사만을 콕 집어 고발한 것에 대해 의도적 또는 정파적 행위라며 억울해할 법도 하다. 실제로 ‘조국 사태’ 이후 조선일보에 대해 적대적 성향을 드러내 온 최강욱 의원 등이 고발인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현 정부(문체부)와 여권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의심할 만도 하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조작과 부정은 이 신문이 고발·비판했던 조국 일가의 문서 위조 혐의와 최강욱 의원의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혐의나 다를 바 없다.

또한 조선일보에 대한 고발은 116만부라는 최고 부수를 자랑하는 '1등신문'이기에 감내해야 할 몫이기도 하다. 부수조작이 조선일보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닐지라도, 개혁의 성과와 징벌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때로는 '한 놈만 팬다'는 전술이 유효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문체부의 사무검사 결과 발표로 ABC부수공사의 조작과 부정이 드러났음에도 개선(改愾)의 정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침묵하는 것도 통장 잔고 29만원을 들먹이며 추징금 납부에 비협조적인 전두환의 '배 짜라'식 안하무인을 연상시킨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겨레는 1면에 '문체부, ABC협회 신문부수 부풀리기 확인' 기사를 실어 문체부 조사 결과를 상세히 전하고 6면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한겨레는 "협회 회원사인 한겨레신문사도 유료부수 인증 부수를 부풀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한겨레 부수도 정직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또한 사설에서 "신문사가 지국에 보내는 신문 10부 중 4부는 구독료를 제대로 다 받지 못하는데도 유료부수인 것처럼 발표한 것"이라며 "신문사들은 유리한 인증을 받기 위해 팔리지도 않을 신문을 지국에 밀어내고 할인판매, 세트 판매 등의 방식으로 유가 인증 부수를 늘려왔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어 "신문의 유료부수 부풀리기는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독자와 시민에게 정직하지 못한 일"이라며 "부수 인증 제도의 신뢰성,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에 한겨레를 포함한 모든 신문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업주 방응모는 동아일보 신문지국장 출신

"오늘날의 정치권력은 자기들에게 불편한 뉴스를 '나쁜 뉴스' '가짜 뉴스'라고 몰아붙이면 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가하는 법안들을 '언론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입법하려고 있다. 시민단체로 위장한 이념단체들과 권력의 편에 선 매체들을 동원해, 진실을 수호하려는 언론들에게 '적폐'이자 '말살되어야 할 악(惡)'이라는 오명을 씌우고 있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3월 5일 창간기념사에서 "일제는 1940년 조선일보를 폐간시켰고, 광복 이후 정치권력은 하나같이 언론을 길들이고 통제하려 해왔다"면서 이렇게 비판했다. 자화자찬과 비판만 넘쳐날 뿐 성찰은 1도 없다. <미디어오늘>은 지난해 3월 '조선일보 100년, 100개의 장면'이란 기획기사에서 그 첫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방응모는 1922년부터 5년간 평안북도에서 동아일보 신문지국장이었으며 신문 대금이 밀려 본사로부터 수모를 겪기도 했으나 금광을 발견해 벼락부자가 되어

1933년 3월21일 조선일보를 인수했다.”

조선일보가 창간 100년사에서 감춘 것은 홀대받던 신문지국장에서 벼락부자가 돼 경쟁지의 사주가 된 창업의 비화뿐이 아니다. 1940년 폐간 전까지 매년 1월 1일 일왕(日王) 부부 사진을 1면에 큼지막하게 싣고 충성을 맹세한 친일의 역사는 애써 모른 채했다.

1970년대 박정희 유신체제에 저항한 기자들을 해고한 사실, 고(故) 방우영 회장(방상훈 사장의 삼촌)이 1980년 5월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만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입법위원으로 참여한 사실 등 군사정권과 유착한 어두운 과거에도 눈을 감았다.

일찍이 언론학자 강준만은 ‘조선일보 방우영 회장의 미덕과 해악 - 여론을 지배하는 ‘밤의 대통령’?’(인물과사상 6호, 1998년)에서 방우영 회장의 성공 비결을 △탁월한 용인술 △철저한 상인정신 △저돌적 공격성 △적극적 권언유착의 네 가지로 분석한 바 있다.

‘전두환 대통령 만들기의 1등 공신’인 조선일보는 사주가 국보위에 참여한 5공시기에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조선일보 매출액은 1980년 당시 161억원으로 동아일보(265억원), 한국일보(217억원)에 뒤쳐졌지만 5공을 거치고 난 1988년 매출액은 914억원으로 동아일보(885억원), 한국일보(713억원)를 꺾고 ‘1등 신문’이 되었다.

언론통폐합 때 동아, 중앙, 한국 등 유력지들이 방송사나 자매지를 빼앗긴 충격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조선일보는 오히려 신군부와 밀월관계를 누리면서 급성장의 길을 걸었다. 강준만이 “1980년 언론 통폐합은 전두환에 대한 충성심이 가장 강한 조선일보의 고속 성장을 가능케 했다”고 평가한 대로, 80년대 권언유착의 어두운 과거는 오늘날의 ‘1등 신문 조선일보’를 만든 사회적 자본의 고갱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조선일보는 ‘5공의 자식’인 것이다.

하지만 방 회장도 조선일보도 입법위원(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으로 참여한 전력과 전두환 대통령 만들기에 대해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 88년 언론청문회에 불려나가서도 ‘인민재판’ 운운하며 억울한 피해자로 부각시킬 정도였다.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지금, 부수 조작과 부정으로 얼룩진 ‘벌거벗은 밤의 대통령’의 민낯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전두환은 감옥에라도 갔다 왔지만 역사의 법정에서 조선일보는 도대체 무슨 응징을 당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5공 시절 반칙과 특권으로 권력을 유지한 ‘낮의 대통령’과 ‘밤의 대통령’이 꽃피는 춘삼월에 나란히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선부른 판단일지 모르지만 전두환도 조선일보도 이번만큼은 법망을 피해 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NCKK 언론위원회는 전 씨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조선일보에 대한 합당한 응징이 신문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벌거벗은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의 민낯’을 2021년 3월, ‘이달의 주목하는 시선’으로 선정했다.